

# 정책동향

## 산자부,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산업자원부는 최근 자가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연간총생산량의 30% 이내로 돼있던 자가발전사업자 잉여전력의 전력시장 공급 한도를 50% 이내로 확대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지난 2000년말 기준 101개 사업자가 550만kW의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14개 사업자는 잉여전력 485GWh를

한전에 공급해 왔었다. 올 7월 자가용발전설비외에 한전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사업용발전설비는 5,620만kW 규모이다.

전체 자가용전기설비 발전연료 중 36.3%는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폐열, 폐스팀, 부생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관련시행령 개정은 자원절약 및 환경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무역불공정행위 처벌기준 강화

앞으로 원산지표시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하고 과징금도 부과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무역위원

회가 조사·판정해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산자부 장관에게 건의, 이를 세관장에게 위탁했던 원산지표시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해 내년부터는 무역위가 직접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허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또는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현행 연간 물품 거래금액 100분의 2에서



## 정책 동향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무역위는 또 현재 WTO의정서에 의해 중국에 적용되는 '한시적세이프가드 제도'가 고시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중국을 포함 다른 국가에 대한 WTO의정서가 체결될 경우 이를 국내법에 수

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대리인 자격도 변호사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지적재산권분야는 변리사, 반덤핑가격조사분야는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 중소기업청, PL대응 활발

PL법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의 최근 PL대응 동향'에 의하면 전국12개 지방중기청의 PL상담실 이용이 최근 들어 크게늘어 상담 건수가 시행전 50건에서 시행이후 7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사내 PL전문가 양성교육 신청업체도 평소보다 3-4배 증가되고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도 PL법 시행 이전 6개 업체에서 20개 업체로 증가했다.

PL단체보험 가입도 평소 월 20-30건 정도 수준이였으나 7월에는 25일 현재 327건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PL교육기관을 5개에서 2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PL상담요원 1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체인력 4명을 충원하고도 모자라 손해보험사로부터 2-3명의 인력을 추가 지원받아 폭주되는 보험가입요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청, PL영상물 보급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PL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잘알고 대비합시다'를 영상물(비디오, CD)로 제작해 전국11개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은 기술지원센터)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30분 분량의 PL교육영상물의 내용은 PL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PL교육 영상물은 종업원 20인 이상 중소기업 2만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직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PL대책추진방법과

지원시책 등을 설명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PL교육 영상물(비디오테이프 또는 CD)이 필요한 업체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면된다.

### 수도권 법인·공장 지방이전, 취득·등록세 감면시한 연장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법인과 공장이 지방이전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시한이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체권역 내의 법인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올 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면시한을 2005년까지로 3년을 연장키로

했다.

또 기존 법령에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신설 후 5년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 '전액면제' 하도록 해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해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중기청, PL모니터링제 실시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PL모니터링제를 실시한다.

중소기업 PL모니터링사업은 종업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체 1천개사를 지역별, 업종별로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PL대책 추진실태, PL사고발생 및 처리 현황, PL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지원시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PL모니터링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PL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조치, PL정보우선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

이다. 모니터링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 사용전점검 완료뒤 전기공급

앞으로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기존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전기공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는 전기를 공급한 후 3-5일이내에 사용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공급 전에 실시하게 돼 부실시공으로 인한 전기재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를 공급한 후 사용전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점검결과가

불량으로 판정이 나도 전기공급을 중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전기공급 전에 사용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적합판전을 받은 설비에만 전기를 공급,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전은 본사 별관 세미나실에서 신증설 수용가에 대한 사용전점검 업무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각 사업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전처장은 “앞으로는 사용전점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수령하게 되는 만큼 향후 전력사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산업자원부의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사용전점검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자부, 미 회계부정 환율요동 타개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

미국 회계부정 파문으로 촉발된 미국 증시의 불안으로 원 대비 달러환율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

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 급격한 원화절상으로 산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판단, 환율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기적 거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환위험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외국기업과 자금 결제시 주로 사용하던 달러화 외에 유로, 엔 등으로 결제통화를 다변화하라고 당부했다.

원화강세 영향이 큰 미국과 일본시장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고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전략을 채택키로 했다.

이를 위해 품질, 기술, 디자인부문 등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 선점할 수 있는 일등기술에 집중 투자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월드컵 개최로 개선된 국가이미지를 신흥시장 확대기회로 연결하는 등 수출지역 다변화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업체의 경영 투명성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업회계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부통제제도, 상시감사체제, 회계공시기준 등 이미 도입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경영투명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 미국 경제는 급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기를 크게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재발하는 소위 '더블 딥(Double Dip)'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산자부, 전기재해 2005년 선진국수준 감축

앞으로 2005년까지 전기재해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축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령 등 전기와 관련된 핵심 3법령 정비 등 전기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8대 시책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국내 전력소비량이 세계 12위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 등은 후진국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2005년까지 전기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키로 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전기설비 최초시공단계부터



## 정책동향

사후관리까지 일관성있게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8대 시책으로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기3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취약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기용품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화재사고 통계집계체계 개정, 조직적인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제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전기안전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등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 중기청, 폭우피해 중기 최고 3억 지원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복구자금 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등 신속 복구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피해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지원팀의 전문인력,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을 활용해 설비와 장비수리 등 복구에 필요한 기술및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복구소

요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피해액이 지난해 연간매출액 또는 올 추정매출액의 3%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으면 된다.

중기청은 또 피해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받고자 할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까지 상환을 연기해줄 계획이다.

### 기업정보보안경영시대 열린다

기업경영의 중요 기밀정보와 고객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정보보안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보안경영 실무지침이 국가 표준(KS)화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업 정보보안시스템 구축과 보안관리에 관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정보보안경영 실무지침을 KS규격으로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 정책동향

이번 KS규격 제정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기업들의 e-비즈니스 활성화와 비례해 보안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능적인 정보유출과 해킹 등에 대한 정보보안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보보안경영 실무지침은 인사보안·자산관리·외부침입에 대한 물리적 경비,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환경적 관리, 네트워크 관리, 정보시스템 접근 관리 등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술표준을 체계화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KS제정으로 기업이 정보보

안경영이라는 신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을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하게 구축할 수 있는 핵심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표준원은 또 이같은 정보보안경영 관련 KS규격은 세계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SO17799(정보보안경영시스템)에 일치시킴으로써 앞으로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기업들이 정보 관리능력을 공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케이디파워의 고효율 수배전시스템과 팬트론의 무정전 전원장치가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5월말까지 본청과 각 지방청에 설치된 우수제품등록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품 중 KT, NT, EM, GR, 특허등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정부 각급 수요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품은 케이디파워의 고효율 수배전시스템을 비롯, 축소형배전반(베스텍), 무정전 전원장치(팬트론), 축열식 전기온풍기(서일전기), 웹서버기능이 포함된 분산제어 시스템(비츠로시스)

등 총37개 제품이다.

조달청은 이들 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키 위해 각 수요기관에 조달청 우수제품을 구매해줄 것을 당부하고 건설공사 소요자재인 경우에도 설계시부터 반영하여 신기술제품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정책동향

### 산자부, 45개사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대강당에서 2002년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45개사를 선정 발표하고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증서수여식에서는 전기분야에서 한전기공·원자력연료·삼성전기·국제전기·케이디파워·금호미터텍·엔케이·신영중전기·한영전기 등 9개 업체가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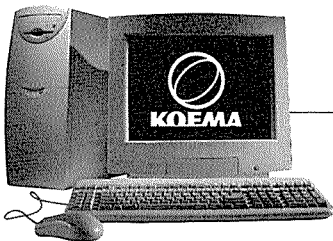
우수기업 선정기준은 최종평가 결과 대기업은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 중소기업은 700점 이상 획득업체로 정했다.

이날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대한 증서수여식에 이어 개최된 경쟁력 향상 심포지엄에서는 최우수기

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의 우수사례 발표와 '21세기 품질경쟁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창적 서강대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제조업 뿐만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품질경영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품질경쟁력 평가지표와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 모든 업체가 스스로 품질경쟁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년 업종별, 규모별로 품질경쟁력이 탁월한 기업을 발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

